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8호 2017년 8월 2일 수요일

남북교류·가야사·과거사 등 국정과제 대응 준비 나서야

文정부 국정과제 불교계 미칠 영향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사실상 향후 정부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문화 · 통일 · 사회 분야에서 불교와 직 · 간접적인 정책 기조들이 담겨있다.

대북교류 재개, 선도 역할을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분야는 통일 부문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종교 분야 남북 교류 재개를 꼽고 있다. 종교 교류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불교계 통일사업 단체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이전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도적 지원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 등은 대북 교류에 좋은 모델이다. 이 같이 문화 교류나 문화재 보수 유지와 같은 통일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 · 제시해 남북교류를 불교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해결, 불교도 관심갖자

정부가 제시한 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과거사별 피해자와 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검토해 위령사업 및 연구 · 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념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19대 이어 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기념재단 설립을 특정 종교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10.27법난 자체를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이번 문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법난 관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현 정부가 과거사를 명확하게 재조명해 사건의 인과를 잘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 추가신고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주4.3에 따른 제주불교 피해를 재조명하는 제주불교연합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은 "제주4.3 당시 사찰은 외진 곳에 있었고, 일본서 공부한 똑똑한 스님들이 많아 유독 다른 종교보다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조명과 배 ·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과거사가 확실하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작된 가야사 복원, 불교계 준비는

불교계와 직접 연관되는 정책 중 하나가 문화재 관련 정책이다.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과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문체부)'다.

이 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논란이 됐던 '가야사 복원'과 관련된 '가야 문화권 조사 · 연구 및 정비'가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명시됐다.

'가야사'를 놓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는 예산 배정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따기' 경쟁은 지양할 것을 충고한다. 불교계도 접근 방법을 예산이 아닌 연구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아직 가야불교에 대한 실체가 없다. 사찰 설화를 허구라고 접근조차 안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연구를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시기다.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정책은 눈에 안 띄네

이밖에 문화재 관련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확대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확대 △전통무형문화원형 보전 강화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나 문화재 돌봄 사업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나온 기조만으로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며 "문화재 분야는 다른 분야들의 정책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문재인 정부 불교 관련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불교 관련 주요 내용	불교계 대응 어떻게
국민 눈높이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10.27법난 기념재단 추진 -제주 4.3사건 내 불교계 피해 사례 조사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 -가야 문화권 조사 · 연구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나 문화재 돌봄사업은 현재도 추진 중. 방향 예의 주시 -연구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하도록 지원 필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종교 분야 남북 교류 재개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사업 선도해야 -신계사 · 영통사 복원 같은 문화 통한 교류 방안 제시



각종 규제에 막혀 불사에 한계를 겪었던 봉은사가 50여년 만에 중창불사를 이뤄냈다. 7월 25일 열린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봉은사 '문화포교 대가람'으로 거듭난다

7월 25일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 개최

규제 밀려 50년 만에 불사
영부인 이례적 참석 '눈길'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며 중창불사에 한계를 겪었던 봉은사의 숙원불사가 50여년 만에 실현됐다. 한국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이 마침내 문을 연 것.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25일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사찰음식 · 다도 · 참선 등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봉은사를 찾는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류관광콘텐츠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됐다. 총 1 · 2관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약 2,403㎡(1관 1,340㎡ · 2관 1,062㎡) 규모다. 각 한옥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총 89억7,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이중 2015년부터 진행된 불사모연 및 무주상보시를 통해 모아진 기금 총 11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준공식이 열린 이날 자리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3,000여 사부대중이 모여 축하했다. 내빈으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나종민 문체부1차관,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참석했다.

특히 이날 김정숙 여사는 본식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과 함께한 비공개 차담서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다도 · 참선 등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오늘은 봉은사 사부대중이 오랫동안 간직한 진솔한 서원을 나누는 동시에, 물질문명에 지쳐가는 시민들에게 정신의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수도산 맑은 도량에 청량하게 뿌려지는 날"이라고 치사했다.

또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50여 년간 여러 법적 규제를 받아 수행 및 신행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오늘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으로 신도들에게는 신행활동공간을,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외국인들에게는 품격 있는 사찰체험 프로그램 등 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단 위상 맞는 선거문화 정착 앞장"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통해 결의문 발표

오는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종회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7월 27일 종회 분과회의실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종책모임 회장단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금권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앙종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중앙종회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로 종도와 불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정법을 수행하며 구세대비 원력으로 이타행을 하는 승가공동체에 대한 기대"라며 "선거에서 중앙종회의원이 앞장서서 왜곡된 선거풍토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립, 종단의 안정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부당한 행위 하지 않기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시 중앙종회의원의 모든 특권 내려놓기 △후보자의 원력과 종책,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해 종단 위상에 맞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